

【제1주제 토론문】

“선거보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정보오염 환경에서 전통언론의 역할” 토론문

김 대 영
KBS 선거방송기획단장

김민정 교수님의 발표문을 보고 많은 공부가 됐다. 발표자는 정보오염 환경에서 전통언론의 역할을 ‘팩트체크 강화와 양질의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통언론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허위정보를 바로잡는다는 믿음과 정보오염 환경에서 ‘양화’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보다 해결책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다.

한국 언론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해결책 실행에 동참해서 선거보도를 바꿀 수 있는가?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발표문에서 지적하듯 한국 언론이 ‘허위정보를 바로잡는다는 믿음과 정보오염 환경에서 양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대부분의 언론사의 경우 ‘그렇다’라는 답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언론이 허위정보를 바로잡기는커녕 스스로 생산단계에서 왜곡과장 보도(mis-information)를 일으키고 배포/재생산 단계에서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관행과 경쟁 속에서 허위조작정보나 왜곡과장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의 한국 언론은 누가 더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싸우느냐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자가 돼서 싸움을 선동하고 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전통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사명과 의무를 개인 기업 형태인 언론사 사주(경영진)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선의와 자율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퍼트 머독의 말처럼 ‘뉴스는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상품’이다. 그런데 뉴스를 만드는 그 많은 돈은 누가 지불하고 있나? KBS 등 일부 공영미디어를 제외한 대부분은

광고주(대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것도 매우 불투명하고 시대착오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이다. 이럴 경우 미디어 기업이 복무하는 대상은 사주(자사)와 광고주의 이익이다. 생산단계에서 왜곡과장 보도를 거를 동기도 없고, 포털사이트 노출을 위해 치열한 클릭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양화’ 제공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주지하다시피 따옴표 저널리즘은 오늘날 한국 언론의 가장 고질병으로 꼽힌다.

최근 필자가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정치합시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출연료 관련 기사가 여러 건 나왔는데, 기사를 낸 언론사 어느 곳도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취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편집에 따른 의도 왜곡’ 때문이라며 1회 차 만에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자 많은 언론사가 이를 ‘따옴표’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관계자 등에게 직접 취재한 곳은 연합뉴스 한 곳 뿐이었다.

허위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양질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양질의 보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주(자사)나 광고주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허위정보 생산 및 배포를 누군가 강제하거나 규율하지 않는다면 최근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이 언론에게 양질의 보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허위정보는 이야기 구조가 단순해서 전달력이 높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팩트체크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 출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 자체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수면자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양질의 정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보겠다. 여론조사 역시 매우 비싼 상품이며,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 도출되는 품질이 천양지차다. 일반적으로 전국 표본 1천명 기준으로 1,500만 원 이하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언론은 조사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앞 다퉈 여론조사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결과는 언론이 보도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불량한 정보인지를 잘 보여줬다.(【별지】 참조) 2016년 총선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으로 언론사, 언론단체, 학자, 조사회사가 참여해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2016.12.)을 제정해 배포했다.

하지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아무도 따르지 않으며 심지어 이러한 준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언론종사자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지금도 갤럽과 리얼미터

(ARS) 여론조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여론의 기준이 돼버렸다. 거의 모든 언론이 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ARS 여론조사는 보도를 자제하고(「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8조제2항제2호), 언론사 스스로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비용을 투입해 높은 수준(양질)의 여론조사를 보도하도록 권고(「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0조)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왜곡과장 보도, 따옴표 보도, 불량한 여론조사 보도가 쏟아질 것이다. 언론사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뉴스 수용자가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분하고, 좋은 언론과 좋은 기사를 향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언론사 및 언론종사자들은 독자의 비용 지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등 허위정보를 바로잡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KBS와 같이 수신료를 받는 공영미디어에는 이런 정보오염 환경에서 허위정보를 걸러내고 불량한 보도가 구축(驅逐)될 수 있는 양질의 보도를 해야 하는 공적 책무가 강하게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인 소유구조나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MBC, 연합뉴스, YTN 등의 언론사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미디어들이 모두 양질의 보도라는 공적인 책무에 동참해주길 기대해본다.

【별지】

한겨레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001면 중항

“새누리 170석 육박, 더민주 100석도 위태”

여론조사기관 5곳 전망

“국민의당 25~35, 정의당 6~8석”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무난히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분열 속 국민의당 부상과 호남

약세 등의 악재 탓에 100석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관련기사 4·5·6면 <한겨레>가 10일 한길리서치, 오피니언라이브, 아젠다센터 등 5곳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 예측을 모은 결과 새누리당의 예상 의석은 155~170석, 더민주는 80~99석, 국민의당은 25~35석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6~8석, 무소속 당선자는 6~1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분열이란 유리한 구도 속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과반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국민의당이 약전하면서 (더민주와) 경합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유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새누리당이 무난히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27석이 걸린 충청권에서도 2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막판 보수층, 노년층의 결집 가능성도 새누리당 강세를 점치는

근거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지세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 145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 전망치 135석보다 10석 가량 늘어난 것이다.

더민주의 세자릿수 의석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망이 우세하다. 다섯 곳의 기관 가운데 단 한 곳도 100석 이상을 점진 데가 없었다. 대부분 90~95석이 현실적인 수치라고 봤다.

> 4면으로 이어짐

성연철 이유주현 송경화 기자 sychee@hani.co.kr

경향신문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001면 중항

새누리 과반 더민주 100석 흔들 국민의당 약진

<교섭단체 구성>

총선 D-2 여야·여론조사기관들 막판 판세 분석

각당, 지지층 결집 위해 “어려운 상황”... 새누리 “145석 안팎” 엄살 더민주 “거대 여당 출현 임박” 긴장... 국민의당 “최대 40석” 기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3일 대전(大戰)’에 들어갔다. 여야 각당은 선거 예측과 관련해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일제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적 전망을 쏟아냈다. > 관련기사 3·4·5면 여야의 ‘비관론 경쟁’ 속에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과반 무난, 더불어민주당 100석 불투명, 국민의당 교섭단체 넘는 선전’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총선 판세와 관련해 ‘145석 안팎’이라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놨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

핑에서 “현재 자체 분석으로 145석 전후로 얻어 과반이 되지 못한다”며 “선거 초반에 비해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예상의석수를 130석 대로 전망했다.

더민주의 ‘새누리당 180석, 더민주 100석 이하’로 예상했다.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경합지역을 반반 가져오더라도 비례대표를 포함, 100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대 여당의 출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예상의석수를 35석으로 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4·13 총선 판세

(단위: 석)

구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기사	163	88	32	6	11
노사	165	90	29	8	8
드사	158~170	90~100	28~32	6~8	7~10
트사	157~175	83~95	25~31	3~7	5~9

시하면서 최대 40석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호남 20개, 수도권 4~5개, 비례대표 10개 등 35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30~40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새누리당 157~175석, 더민주 83~100석, 국민의당 28~32석을 예상했다.

연합뉴스가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이들 예측을 종합하면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의 100석 확보가 여의치 않은 판

면, 국민의당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의석수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원내 3당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9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율이 12.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전국단위 선거인 2014년 6·4 지방선거 때의 11.49%를 웃도는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선관위는 총선 투표율을 50%대 후반으로 예상했다. 사전투표가 없었던 19대 총선 최종투표율은 54.2%였다.

김진우·박홍두 기자 jwkim@kyunghyang.com

빛나간 선거 여론조사, 유권자 혼란 막게 정비하라

4·13 총선은 여론조사의,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를 위한 선거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현역 의원 평가와 컷오프, 총선 후보 선출에 제시된 근거는 늘 여론조사였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는 정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동일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를 넘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의뢰자의 의도에 맞게 여론조사를 해주는 기획 여론조사 기관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가 적발해 처벌한 여론조사만 1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응답이 믿는다는 의견보다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 고작 1~2% 응답률로 판세를 예측하니 높은 정확도가 오히려 기적이다. 게다가 주로 집전화에 의존하는 조사 방식 자체의 한계도 있다. 현실에서 집전화 가입자는 줄고 휴대전화는 표본 수집이 어렵다. 대

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수치가 정치판에선 금과옥조다. 정확성이 의심되고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된 여론조사가 정당의 공천 결과를 좌우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출렁이게 만든다.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다. 이번 총선을 놓고 주요 여론조사 기관은 새누리당 157~175석, 더불어민주당 83~100석, 국민의당 25~31석을 전망했다. 실제 결과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여론조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무엇보다 100개 이상 난립한 업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번에도 도입된 무선전화 안심번호제를 잘 다듬어 정당뿐 아니라 여론조사 회사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한겨레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004면 중형

포 빛나간 여론조사...‘집 전화’의 한계

“저희도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솔직히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다.”(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이번에도 여론조사는 빛나갔다. 여론조사 무용론과 함께 시급히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무난한 과반 확보와 더불어민주당의 100석 이하 참패를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155~170석, 더민주는 80~99석, 국민의당은 25~35석, 정의당은 6~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6시 나온 출구조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에스비에스(SBS) 출구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129~147석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의석은 최대치를 잡더라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더민주는 최소 97석에서 최대 12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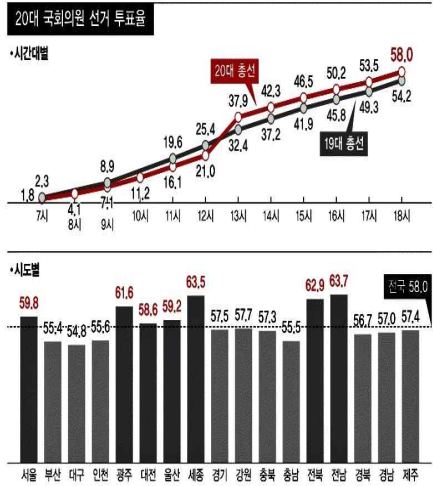
가장 적어도 100석에 육박했다. 당별로 ±20석 이상의 차이가 난 셈이다. 국민의당은 31~43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 개표가 진행 중인 14일 04:20분 현재 253개 지역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는 새누리당 107, 더민주 106, 국민의당 26곳으로 더민주가 앞섰다.

여론조사가 빛나간 것은 이번 총선만의 일이 아니다. 19대 총선 당시에도 여론조사 기관 대부분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을 꺾고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얻어 1당이 됐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지금 방식의 여론조사로는 정확한 민심을 짚어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여론조사는 무선전화로 이뤄진다. 무선전화 보유율은 50% 미만이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안심번호

방식의 조사는 금지돼 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유선전화만으로는 젊은층의 표심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20~30대 응답률이 너무 낮았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선거 일주일 전 안심번호를 가미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과반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실제에 가까웠다.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별로 수십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같은 지역 여론조사도 기관에 따라 1, 2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가운데는 선거 때만 나타나거나 후보들과 결탁한 수준 미달의 여론조사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한 S&P리서치 대표를 구속했다. 이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



문가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각종 여론조사가 난립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너무나 높아 응답률 자체가 너무 낮다”며 “여론조사기관의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신뢰도는 날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ychee@hani.co.kr